

'완주전주 통합 반대' 거센 저항을 받은 김관영 도지사

군의회 · 군민과의 대화 장소 진입 저지당해

김 지사,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 완주 방문
완주군의회 · 군민들의 통합 반대 목소리에 발걸음 돌려
"찬반 의견 수렴하고 분석... 군민 현명한 판단토록 돕겠다"
유희태 군수 "갈등 없이 갈 수 있는 방향서 도지사와 협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26일 완주군청을 방문해 군민과의 대화를 열 예정이었으나 완주-전주 통합을 반대하는 완주군민들에 의해 장대로 들어서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26일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이라는 슬로건으로 완주군을 방문했지만 '전주-완주 통합'을 반대하는 완주군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았다. 이와 같은 저항을 인지하고 완주군을 방문한 김 지사는 도착하자마자 완주군의회를 찾았다. 하지만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모두 '통합반대'의 하얀 어깨띠를 두른 채 입구에서 김 지사를 맞이했다. 김 지사는 군의원들과 모두 악수를 했지만 군의원들은 군의회 진입을 가로막았다. '전주-완주 통합'의 반대 의사 표시였다. 유희태 완주군의회 의장은 "대화라는 것은 서로 양보해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이라며 "도지사가 대화의 의지가 있었다면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기 전에 왔어야 한다"고 했다. 함께 서있던 군의원들도 "이미 버스는 떠났다"며 고성이나 오가기도 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면서 "군의원들의 마음은 이해한다. 서

로 열린마음으로 (앞으로)만들게 만나서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결국 김 지사는 군의회 진입에 실패했다. 이후 이어진 군민과의 대화 장소에 도착한 김 지사는 이반에도 군민들의 거센 저항에 가로막혔다. '통합 반대' 측의 군민들이 군민과의 대화 장소 진입을 저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두 문을 걸어 잠근 군민들은 김관영은 물러가라, '통합 반대', '완주군 없앨려고 왔니',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유희태 완주군수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오늘 나는 완주군민의 (반대)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길을 열어달라"는 부탁에도 군민들은 봉쇄를 풀지 않았다. 되돌아 오는 답은 "김관영 도지사가 완주를 떠난 뒤 허가하겠다. 절대 문을 열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1차 진입에 실패한 김 지사는 결국 잠시 완주군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유희태 완주군수가 또 다시 설득에 나서고, 김 지사가 20여분 뒤 내려와 다시 군민과의 대화 장소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김관영 지사는 "오늘은 완주군민들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반대이견과 찬성의견을 청취하고 냉정한 분석과 평가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리를 마련하려 했다"며 "하지만 물리적으로 입장 자체가 되지 않고 또 안에서는 500여명의 군민들이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완주-전주 통합과 관

련해 찬성 측이건 반대 측이건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분석할 것"이라며 "최종의사결정권자인 완주군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발전위원회를 통해 통합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갈등 없이 갈 수 있는 방향에서 도지사와 협력하면서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가 하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완주 통합'을 두고 완주군민들의 갈등이 심해지는 가운데 김 지사의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 마지막 시군 방문이기도 했던 완주군 방문은 결국 환영받지 못하는 방문이 됐다. 한편,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24일 지방시대위원회에 완주군민의 전주-완주 통합건의서와 전북도지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시군공무원노조연맹 내달 '청년공무원 소통데이'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전북시군연맹)이 오는 8월 9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 시군 청년 공무원 300명과 함께 전북현대 흥경을 관람하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는 전북시군연맹의 청년국이 신설되고, 청년 조합원 육성 계획의 1년 차 사업 '관심이 생겼다'라는 주제로 청년 공무원의 연대 의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특히, 시군마다 10년 이내 임용된 저연차 공무원 비율이 50%에 육박하고 코로나19를 거치며 청년 공무원 간 소통의 기회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청년 공무원에게 노동조합이 자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단체라는 사실을 알리고,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도록 의미를 더할 전망이다. /이만호 기자

도내 기초의회 임시회 폐회

익산시의회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지난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열린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청취하고 수해복구 봉사활동,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비롯한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위원장에는 강경숙 의원, 부위원장에는 조은희 의원, 위원에는 이종현, 최재현, 소길영, 김순덕, 조규대 의원이 선임됐다. 김경진 의장은 "장마가 막바지에 이르러 있으나 추가적인 태풍과 기습성 폭우 등이 예상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추가 피해 예방과 수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양정민 의원은 익산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전략을 제안했고, 이종선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 대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남석 의원은 반복되는 수해 피해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최재현 의원은 공동주택, 소규모 주택 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 관해 발언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김제시의회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는 지난 26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 별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으며, 마지막 날인 26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오승경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학교·서원 발전 지원 조례안'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새롭게 구성된 하반기 김제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첫 업무 보고에서 의원들은 그간 업무의 추진 상황을 중간 점검하며, 참신한 의견 제시는 물론, 집행부의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더불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서백현 의장은 집행부에 "이번 주요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는 황배연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과 낙후된 전북특별자치도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정부 유보통합 계획 불확실... 모두 발만 동동"

전북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지원 특위, 업무보고 청취 유보통합 관련 인력 증원 교원 역량 함양 등 주문 "세심한 배려로 정책 마련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는 교육부가 지난달 27일에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른 도청·도교육청의 대책 및 추진 상황 등에 대해 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희, 군산 3)는 교육부가 지난달 27일에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른 도청·도교육청의 대책 및 추진 상황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는 도청 복지여성보건의료국 시작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순으로 진행됐으며,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대한 브리핑 및 현재까지 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용태 위원(진안)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및 향후 예산 확보 방안 관련 질의를 하며, "특별교부금 지원과 별도로 도청과 도교육청이 협력해 시범학교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정수 위원(익산)은 "유보통합 계획에 대해 교육부가 총괄적인 설계를 하고 있지만, 그 계획 및 재정확보 등에서 미비한 부분이 많다"면서, "미비한 계획을 그대로 수행할 경우 그 피해가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도청과 도교육청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교육부에 우수정책 등을 제안할 것을 요구했다. 임승식 위원(정읍)은 현재 도내 유보통합 관련 TF 운영 현황 및 업무 담당 인원에 대해 물으며, "유보통합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지원 인력을 늘려서라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임 위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업무 부서가 교육부로 일원화되었지만, "도청은 유보통합 관련 업무를 넘기는 데 급급하지 말고, 도교육청과

충분한 상시 협의를 통해 교육의 양적·질적 통합에 초점을 맞춰 달라"고 주문했다. 이정진 위원(남원)은 유보통합 운영 매뉴얼이 있는지 물으며, "유보통합에 있어서 교원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며, "교육·보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처우개선 부분에 있어서도 유치원 교사나 어린이집 교사 사이에 편견 없이 상호 원활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희 위원(군산)은 "어린이집 6개 분과(국공립·사회복지법인·가정·직장·민간·법인단체 등)에 대한 도교육청의 속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영향을 받는 다중역할 보육시설로 영유아나 폐원 시 남은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해야 하는데, 유보통합으로 인해 폐원할 경우 그에 대한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며, "관련 로드맵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유치원의 경우 영아 돌봄 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는데, 그에 대한 시설 마련 대책은 있는지, 영·유아학교 시범학교 지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물었다.

끝으로, 박정희 위원장은 "지금 정부의 불확실한 유보통합 계획으로 인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 모두 발만 동동 구르는 상태"며, "전북자치도청과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유보통합 추진지원특별위원회도 발 맞춰 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입법평가위원 위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최근 의정실에서 입법 평가를 통한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자치입법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신규 입법평가위원 5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위촉식은 제12대 의회 하반기 개원으로 상임위원회가 개편됨에 따라 기존 내부위원(도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당연직인 의회운영위원회 윤수봉 위원장을 비롯하여 4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 각 1명씩을 추천받아 이수진 의원, 권오연 의원, 서난이 의원, 박용근 의원 등 총 5명의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며 추진됐다. 임기는 2년이다. /이만호 기자

대도시권에 전주권 포함... 광역교통 문제 개선

국힘 조배숙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대광법' 발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 당 전북특별자치도 당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광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거점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규정하는 특례를 신설해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탄생한 전북과 강원도의 경우 도청 소재지로 생활인구가 집중돼 있으며, 인접한 시군 간 광역교통 수요 증대로 지속적인 교통혼잡이 발생해 국가·지자체 차원의 교통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북과 강원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인근에 없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 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배숙 의원의 법안에 따라 도청 소재지인 전주권과 춘천권이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될 경우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시설 30%의 국비가 지원돼 국가 차원에서 광역교통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조배숙 의원은 "22대 국회에 다시 등원할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을 위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라며, "정부 여당의 소통 창구로서 여·야 협치를 통해 전주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학교도서관 질적 성장 위해 사서교사 배치돼야"

오현숙 전북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대표·정의당)은 지난 25일 진행된 제4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북자치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 계획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 전북지역 학생들의 한해 독서량은 25.7권으로 2년 전보다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의 독서량이 36권으로 2년 늘어난 결과와도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전북자치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인력 188명을 충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신규 채용 계획을 살펴보면, 사립학교에는 67명의 사서교사를, 공립학교에는 사서교사가 아닌 101명의 공무직 사서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오 의원은 "이러한 도교육청 사서 인력배치 정책은 엄연한 공교육에 대한 차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독서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의 공무직 사서 배치 계획을 철회하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사 과잉 문제와 연계해 일반교사의 사서교사로의 전과하는 방안 등 올바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